

여야, 전력망 확충 한목소리… ‘원전 vs 재생’ 계산법 관건

정치권, 전력공급 과제 부상
여야 관련 특별법안 발의
확충방안 두고 마찰 우려도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첨단전략 산업에 고품질과 대용량의 전력 공급을 하는 것이 정치권의 당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21대에서 폐기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이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재발의돼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노리고 있다.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의 이견이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22조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 짓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량은 완공 시 14.7GW(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형 원전 10기에 이르는 전력량이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태양광 발전·풍력 단지 등 전국의 발전소에서 전력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문제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행 송전선로로는 전력을 온전하게 공급하기 어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모습. /뉴시스

렵다는 것이다. 송전선로를 구축하기 위해선 한국전력이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수용성이 낮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전력망법을 다시 발의했다. 김성원·이인선·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력망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 ▲현행 타법들과 차별화된 보상·지원 제도를 통

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정책적·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 등 정부 주도의 송전선로 구축을 뒷받침한다.

반도체특별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도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전력수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토지보

상 및 주민지원 사업을 대폭 개선하는 특별법안을 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하면서 여야의 논의 토대는 갖춰졌다.

다만, 첨단전략산업에 안정적인 전력망 공급이 우선시 되는 만큼, 전력원을 둘러싼 여야의 세부적인 계산법을 두고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산업 육성 정책과 발을 맞추는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설비용량 대비 가용량이 높은 원전을 우선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시하기 때

문이다.

민주당은 박지혜 의원 등이 재생에너지 확대 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해상 풍력이 발달한 전남 목포를 지역 구를 둔 김원이 의원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과 전략산업사업자와 지원시설이 집약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국고보조금, 주택공급 등 특례를 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 과제’에서 전력망법의 신속 입법을 요청했다. 한경협은 “우리나라의 전력망 건설은 한국전력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첨단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가 필수적이나, 발전량이 급증하는데 반해 송배전망 건설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력수요가 높은 첨단산업단지(반도체 등)에 시기적절한 전력공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조속한 입법해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주당, ‘쌍특검법’ 공세 강화

(김건희 특검법·해병대원특검법)

“연이은 거부권 행사, 헌법 위배”

이르면 5일 재의결 추진 계획
7일 국감서 정부 실정 집중 추궁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해병대원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각에서는 ‘탄핵’이 언급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의지를 밝혔고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에 이어 쌍특검법과 지역화법’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전국민중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발언대에서 윤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무력화하는 것이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국민과 함께 무도한 정권의 폭정을 끝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헌법 원리상의 한계를 넘어설 경우에 그 거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야5당 김건희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 지역사회상생특별법 거부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 행사는 위헌이 돼서 그 자체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 이유로 헌법의 원리 중 하나인 이해 충돌 원칙을 들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 시 사익을 우선할 순 없다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본인의 사법적 책임을 면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재의결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김 여사에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재확인해 대어 압박수위도 높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5일이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108석을 보유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 표가 나

야와 쌍특검법 재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 찬성이 65%가 넘었다며 재의결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리는 국감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 등 증인들을 대거 채택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해당 의혹을 수사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모친 최은순 씨·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종호 전 블랙필인베스트 대표가 증인 등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영선 전 의원·명태군 씨·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증인에 설 예정이다.

/*윤도현 기자 yunbgb0611@

추경호 “이재명 위증교사, 3년 구형 상식적”

“반국가적 선동정치 막아낼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부처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현직 도시사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해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법교란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어제(9월30일) 이 대표는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에게 ‘법을 왜곡한 범죄 행위’라고 비난을 가했다”며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개정안의 본질이 ‘검사검박법’을 넘어 ‘이재명 기소 검사 보복법’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이 법을 검사에게만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이재명 단죄 판사 보복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입법권력으로 판사를 회유하다가, 여차 하면 협박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리고 2일엔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린다”며 “여기에 최근 10년간 박상용 검사 본인과 가족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자료로 제출하라 요구했다고 한다. 한번 탈탈 털어서 짓밟아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되자, 이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전방위적 보복도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탄핵의밤’ 행사를 언급하며 “11월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반국가적 선동의 수위는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국회안에서도 거대야당의 횡포가 점점 더 거세질 것”이라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온갖 악법들을 강행처리하고, 갖가지 탄핵과 청문회를 무리하게 동원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국회의 권한을 악용해 대통령을 레임덕에 빠뜨리려 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검찰과 사법부를 협박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정신 바짝 차리고 단결해서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겠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개인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반국가적 선동정치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